

금융투자업자의 차이나이즈월 제도 운영방향

1. 추진 배경

- 자본시장법 제정·시행시 금융투자업간 경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규제(이하 “차이나이즈월”) 도입('09.2월~)
 - 차이나이즈월 설치대상(예, 금융투자업 vs. 기업금융업) 및 물리적 공간 구분(예, 출입문 별도 설치),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 → 효과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
- 한편, 미국·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,
 - 각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,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·운영
- '20.5월,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나이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·운영할 수 있도록 「자본시장법」 개정('21.5.20. 시행)
 - 법령에서는 차이나이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, 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

< 차이나이즈월 규제체계 변경 방향 >

현행	(법령) 교류차단 대상정보	(법령) 차이나이즈월 설치대상 부문	(법령)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	(신 설)
	↓	↓	↓	↓
변경	(법령) 교류차단 대상정보	(내부통제기준) 차이나이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		(법령) 내부통제 이행·관리 ^②

회사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 가능
(예외정보를 내부통제기준에 미리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함)

②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, 임직원 교육, 책임자 지정, 공시 등의 사항

별첨 1

2. 새로운 차이나이즈월 제도 운영방향

- **(규율체계 구축)**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중심의 자율적인 규율체계 구축·운영

구 분	자본시장법령	내부통제기준 규정 필요사항
대상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공개 중요정보 • 고객자산 매매·운용 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류차단정보 식별·설정방법 • 고객정보 중 교류허용정보 범위
설치부문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보별 교류차단 직무·부서·계열 회사 범위 • 교류차단대상 정보별 또는 부서별 책임자 지정
행위제한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류차단대상 부문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• 예외적 교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(기록 작성·유지 등)
이행·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임직원 교육 • 임원급 책임자 지정 •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	(필요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부통제기준 점검주기, 교육방법 • 내부통제 책임자 권한·책임 관련 사항 • 공시대상 내부통제기준 내용

<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의의 >

- ❶ 회사 내외의 일체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,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정보 관련 부문간 교류를 금지하는 것
- ❷ 자본시장법령내 이해상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*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, 차이나이즈월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기능
- ❸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사내외 정보교류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, 정보교류 관련 타 법에 따른 규제*는 여전히 준수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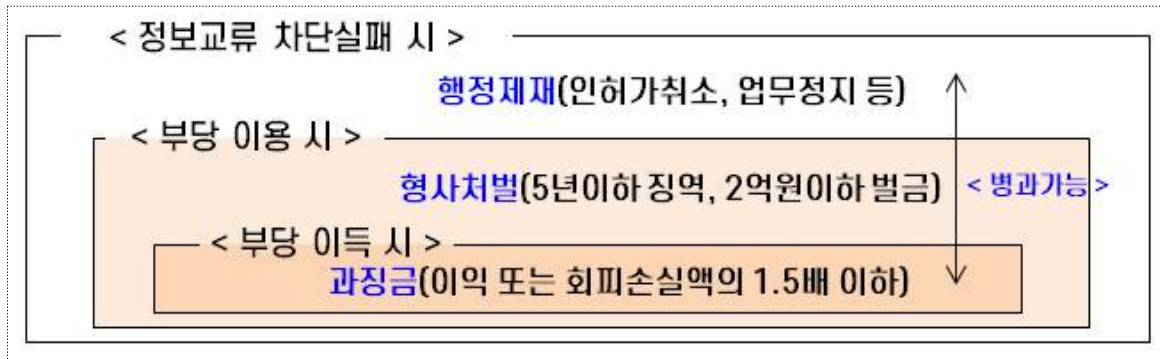
* 예) 투자자 주문 체결 前 선행매매를 한 경우 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펀드 재산으로 매수한 경우 등 → 5년 이하 징역·2억 이하 벌금

* 예) 개인정보법·금융실명법 등의 정보보호 규제와 지배구조법상 임직원 겸직 규제 등

별첨 1

- **(회사별 통제수준)** 회사가 제도를 자율 설계하는 만큼, 통제수준이 전보다 낮아져 이해상충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
→ 회사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마련

- ①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각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
- ② 제도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업계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'차이니즈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' 마련·제공
- ③ 교류차단대상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였거나,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제재·처벌 부과



- ④ 임직원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·운영하는 경우 감독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**(내부통제기준 이행·관리)** 내부통제기준이 보다 충실히 운영·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의무 규정
- ①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관련 법령·내통기준에 대한 이해 및 준범의식 제고를 위한 임직원 교육
 - ② 내부통제기준 운영·개선 및 위반사실 확인시 금융당국 보고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,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조직을 설치·운영토록 함
 - ③ 이해상충 우려가 큰 거래를 정하고,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함

참고 1

개정 자본시장법 중 차이니즈월 관련 조항

제45조(정보교류의 차단)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,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,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(이하 이 조에서 “금융투자업 등”이라 한다)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**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.

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**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
2.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
3.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**

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
2.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
3.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**

제54조(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)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28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)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...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,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**1.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**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444조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
- 6의2. 제54조제2항...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

□ 社内 차이니즈월*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을 구분*하고,

- * ① 고유재산운용업무·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vs. 집합투자업·신탁업간 설치
- ② 기업금융업무 vs. 고유재산운용업무·금융투자업간 설치
- ③ 전담중개업무 vs. 고유재산운용업무·금융투자업간 설치
- ④ 기업금융업무 vs. 전담중개업무간 설치

○ 그에 따른 규제대상 행위*를 규정하고 있음(법 §45 ①)

- * ① 금투업자·투자자의 상품 매매·소유현황 정보, 집합투자재산·투자일임재산·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,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행위
- ② 임원(대표이사, 감사 및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) 및 직원 겸직행위
-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
- ④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서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행위 등

< 사내 차이니즈 월 설치 범위 (자본시장법 시행령 §50①) >

고유재산·매매·중개	자문·일임	신탁	▪ 실선 : 정보교류 차단 부문 ▪ 점선 : 통합운용 가능 부문 ▪ 음영 :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운용 가능
		집합투자	
	기업금융(Investment Banking)		
전담중개(Prime Brokerage)			

□ 아울러, 社外의 경우에도 차이니즈월 설치 필요대상을 별도 구분*하고,

- * ① 금융투자업자 vs. 계열회사간 설치
- ②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금투업자 vs.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설치
-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vs. 외국 금융투자업자간 설치

○ 社內와 동일·유사한 규제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(법 §45 ②)

- * ① 금투업자·투자자의 상품 매매·소유현황 정보, 집합투자재산·투자일임재산·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,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행위
- ② 임원(비상근감사 제외) 및 직원을 겸직 또는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
-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
- ④ 계열회사 등과 업무 관련 회의/통신시 기록 未유지 또는 준법감시인 未확인